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와 줄리 와크Julie Wark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원문은 다음에 실려 있다. <http://www.counterpunch.org/2016/01/08/basic-income-basic-issues/>

유럽은 전 세계 불평등의 “충격적인 수준”을 보여 주는 초대형 지시계다. [구호 단체] 옥스팜OXFAM이 2015년 9월에 내놓은 보도 자료인 「불평등이 커져서 수백만의 유럽인이 추가

■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로 빈곤에 빠졌다」는 “유럽 인구의 거의 1/4인 1억 2,300만 명이 빈곤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데 반해 유럽의 억만장자는 342명”이라는 극명한 명암을 보여 준다. 또 다른 보고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 동안 거부들의 부가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은 악명 높은 통계인 “2016년이 되면 상위 1퍼센트가 나머지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로 요약된다. 이렇게 노골적인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대처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논의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대개 빈곤 퇴치를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것 이상인데,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인권, 즉 물질적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없다면 다른 모든 권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07년에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승인된 「새로운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Emerging Human Rights」 제1조 제3항은 기본소득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개인에게 연령, 성, 성적 지향, 시민적 지위, 고용 상태 등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즉 좋은 물질적 조건에서 살 권리.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고 재정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화폐소득이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개별 구성원에게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그 소득은 기본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영역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전체 세계에 미치는 도덕적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가능한 보편적인 해결책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이 “유토피아주의”라는 케케묵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비웃음이 시작되는데,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데도 말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사회정의**(우리는 이 말이 나왔을 때 나폴리에서 있었던 유럽 사회학 대회에서 코웃음 치던 저명한 경제학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와 관련되면, 가장 타당한 주장은 표명되기도 전에 기각된다. [그리스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 박사 및 그의 유로그룹과 벌이던 협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공들여 준비한 -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 분명한 - 주장을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멍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다. …… 스웨덴 국가를 부르는 게 더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응은 똑같았을 것이다.” 캐비어나 다이아몬드와 달리 규범적인 쟁점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1퍼센트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며, 현재의 교육정책이 보여 주는 것처럼 상황은 비판적인 사고나 윤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

가 있다. 어떤 문화에 속하든, 어디서든,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자신들이 무엇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사유화 형태 속에서 알고 있다.

정의, 자유, 인간 존엄성은 인권을 위한 모든 투쟁의 기본 원칙이다(인권이라는 말이 몇 세기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만 말이다). 오늘날 부의 극단적인 집중은, 그리고 같은 동전의 반대 면인 우리 지구의 고의적인 파괴는 칸트의 기본 도덕률을 사악하게 조롱한다.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합리적 존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세계의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규범적인 원칙을 조롱한다. 만약 어떤 권리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일부의 특권이다. 이곳이 자유 및 인간 존엄성과 함께 정의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자유가 박탈당하고, 따라서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빈곤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자의적인 지배나 제도적 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은 권리들이 법률과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인 정치체제, 즉 사회의 이익을 위해 주권이 국가에 위임되어 있고, 이 속에서 정부가 그 의무를 간과하거나 경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이 신뢰하는 정치체제에서 인권은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 및 주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수반해야 한다.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머리말은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여러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 이 모든 수많은 재난이 지구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약탈하여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자들에게 봉사하는 부패한 정부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 지구의 파괴 및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난민 위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가?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1784년의 「뉴햄프셔 권리장전」 제10조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자의적인 권력과 억압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것은 부조리하고 비굴한 일이며 인류의 선과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끔찍한 전 지구적 체제에 대한 저항이 곳곳에서 다양한 쟁점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저항도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도입부가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인류 가족human family 모두에게, 그들에게 원래부터 존엄성, 남들과 동등한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팔 수 없고 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 더 나아가 “모두”와 “인류 가족”은 정의상 규범적이어야 하는 보편적 범주다. 만약 인간의 삶과 웰빙에 필수적인 재화가 “가족”의 누군가에게는 부정된다면, 인간의 조건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인권”(여기서 “인간”은 보편적이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극단이 된다. 만약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멸시”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끔찍한 “공공의 불행”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적

인 - 이 말의 최상의 의미에서 - 세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은 잊어버려야 하며 사태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인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축되고, 계속해서 더욱 배타적이며 야만적인 인간 그룹의 터무니없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말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본소득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와 실험에서 기본소득은 대개 도구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우파는 기본소득을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방도로 보며, 좌파는 빈곤을 퇴치하거나 노동력의 로봇화에 맞서는 방도로 본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규범적으로 사고하면, 기본소득은 그 이상의 것이다. 기본소득은 고전적인 민주적 공화주의가 오래 전에 설파한 중요한 세 가지 인권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물질적 생존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민주적 공화주의와 과두제적 공화주의 모두 이러한 자유 개념을 공유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누구의 자유인가? 과두제적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성인 남성 재산소유자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반면에 민주적 공화주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옹호했다. 모든 자의적인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몇몇 간섭은 사회 정책상 다른 간섭과 달리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런 간섭들은 인간 사회의 동학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와 거짓은 개인

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현상태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사회는 재산에 기초해 있다(그런데 재산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돼지, 훈제 청어, 닭, 소 등 동물원에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말해 보자. 통계적인 의미(통계는 나름의 묘사라는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독립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이다.

일부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불평등은 몇 가지 요인의 결과물인데, 주로는 정치경제적인 요인의 결과물이다. 어떤 정치경제학이든 일부를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를 불리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구 대부분은 “긴축” 같은 정책에 의해 쉽게 자신의 것을 빼앗길 수 있으며, 제레미 코빈의 말을 인용하자면 “긴축은 정치적 선택이지 경제적 필연성이 아니다.” 이 경우에 선택한 사람이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수가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항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기본소득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정치경제학과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나오미 클라인은 환경적 연관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다. “그것이 내가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말하는 이유이며,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나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조치 - 실업수당, 최저소득, 워크페어 등등 - 는 저열하건 관대하건 언제나 조건적이었다. 이를 받기 위해 실업을 당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 낙인이 있어야 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며, 낙인이 없고, 심지어 절약의 효과까지 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조치를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사람들을 감시하고 낙인을 찍는)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기본소득보다 클 경우 그 혜택을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효과적이려면 빈곤선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전의 사회정책과 달리 배제에 맞서는 조치다. 물론 기본소득은 부자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는 '그러나'가 따라온다. 인구의 절대다수인 대략 80퍼센트는 기본소득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20퍼센트는 손실을 볼 것인데,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재원이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는 조세개혁 같은 방도로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카탈루냐(와 스페인)에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한 부의 재분배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것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 인식에 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의 부자들은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91퍼센트의 세금을 냈으며,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세금은 20만달러 이상에 대해 70퍼센트로 떨어졌다. 로널드 레이건과 그의 벗인 마거릿 대처의 등장과 함께 신의 선물은 주머니를 더욱 두툼하게 했다. 2008년에 40만달러를 버는 개인



에 대한 세율은 29.6퍼센트였으며, 자본소득세는 겨우 15퍼센트였다. 그 이후 8년 동안 자신들이 가진 돈의 힘을 세금을 매기는 정부의 책무를 알아먹는 데 사용한 억만장자들을 위해 ‘소득을 지키는 산업’이 번성했다. 그들이 정치 캠페인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 생존 수단을 위한 재원이 누진세 제도를 통해 부자들에 의해 마련된다면 기본소득은 분명히 빈곤 퇴치 정책 이상의 것이 된다. 기본소득은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고도로 정치적인 정책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매우 다른 자본주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가 1970년대 말의 자본주의,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반개혁과 실제로 다른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다.

칸트는 『도덕의 형이상학의 기초』(1797년)에서 “정부의 불의에 의해 혜택을 보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썼다. “이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도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부의 선행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부자 - 이들은 자신들을 가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낀다 - 의 도움이 실제로 선행이라고 불릴 만한가?”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는 **총체성**과 연결된 더 높은 의식에서 나온다. 총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인류성의 보편적 기

반, 우리 종種과 우리 지구의 궁극적인 도덕률로부터 움직인다. 우리가 불타 버리고 바짝 마르고 홍수가 나고 황폐화된 우리 지구의 남은 부분을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 도덕률이 우리 종과 우리 지구의 궁극적인 생존 법칙이 되는 그런 길로 가야 한다. **조교**